

# 박홍근 “비극적 죽음 막기 위해 건설안전법 논의 미룰 수 없어”

### 22일 민주-민주노동당 건설노조 간담회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 “건설안전법 입법 추진...정부·여당 압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관련 입법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최인호·조오섭 의원 등은 이날 민주노동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에만 417명, 올해 9월까지 253명의 건설노동자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 인사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상위권에 머무르는 노동 후진국”이라며 “작년 발생한 828명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 노동자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 현장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교흥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대표발의했고, 제가 을지로위원장이던 시절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던 문제”라면서 “국민의 힘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안전 중시는 버리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에 빠

져있는 판에, 정부여당의 협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며 입법을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장욱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설사업 현장에서 1년에 거의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매년 산재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9일까지, 정국회 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금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에는 공사 기한을 정하고 모든 주체가 책임지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난 화정동(아이파크) 사고 때 당론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선거기간이 되다 보니가 무효화된 부분이 있다”며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장욱기 민주노동당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국회에서 법이 제정돼 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정 단계별 적정 기간·비용을 보장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이슬기자

## 尹대통령, YS 7주기 맞아 묘소 참배 “거산의 큰 정치 되새겨야할 때”

### 비공개로 輿지도부와 국립현충원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리고 “참배는 현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 아호)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는 비

공개로 진행했으며 풀 기자없이 전속만 대동했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 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들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영삼민주센터 김덕룡 이사장, 김무성 이사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6주기에는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어 올해 2월 19일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씨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 이재명 “정부여당, ‘빛내서 집사라’ 정책 올인...반성하라”

### “확대해도 모자란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원 삭감” “국토위서 복구했지만 쉽지 않아...반드시 확보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매우 미치지 못한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은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경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주거안정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또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길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없애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